

김부겸 전대 불출마...송영길 오늘 출마선언

민주 당권 대진표 속속 윤곽...이해찬 거취 최대 관심 설훈·이인영 단일화 내일 담판 ... 최재성 막판 고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최대 변수로 꼽혔던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17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권 대진표가 속속 구체화되고 있다.

차기 민주당 대표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려온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개각과 저의 출마 여부가 연동돼 인사권자인 대통령님께 폐를 끼치고 있다. 이에 제가 먼저 불출마를 밝혀 대통령께 드린 부담을 스스로 결사해지코자 한다”며 “8·25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저로 인해 혼선과 역측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에 제가 먼저 결단 내리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20~21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앞두고 다른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범계 의원과 지난 15일 두 번째로 출마를 던진 김진표 의원에게 이어 “진정한 호남의 대표 주자”를 내걸고 송영길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 송 의원은 “송 의원은 민주당 전 부대변인은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18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의 변화와 새로운 경제, 개혁입법, 지방 분권에 대한 비전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북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의원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민주당’을 표어로 내걸고 당심을 파고들 방침이다.

지난 14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사실상 출마 의사를 표했던 김두관 의원은 오는 19일 공식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상황을 주시하며 출마에 대한 의지를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평화국민연대(민평연) 소속의 설훈·이인영 의원의 단일화 가능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두 의원은 이날 오전에도 만나 단일화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후보등록 전날인 19일 다시 회동, 최종 담판에 나서기로 했다. 설 의원은 “특별한 이견이 있다기 보다 서로 출마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이라며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19일에 한 번 더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설 의원은 다만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예정됐던 출판기념회 일정은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당내에선 통상 출판기념회를 통해 출

마 선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결국 두 의원 모두 ‘마이웨이’를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해철 의원과 단일화를 논의하다 전 의원 불출마 선언 이후에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최재성 의원의 경우 마지막까지 고민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최 의원 본인의 출마 의사는 확고하지만, 주변의 만류 등으로 후보 등록 직전까지 정리 작업을 계속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해찬 의원의 경우도 아직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7선으로 당내 최다선인 이 의원이 차기 리더로서 당권 관계에서 당의 위상을 강화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의견과 당 지도부로 직접 나서기보다 2선에서 후배들을 지원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문희상 의장 “연내 개헌안 도출”

70주년 제헌절 경축사...“개혁입법 협치로 풀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촛불 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1987년 헌법은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주의의 절정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지만 그동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했다”면서 “이제 현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지금의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부’라는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원칙이 작용하는 정글의 체제”라면서 “이런 정치 파행의 악순환은 모든 힘이 최고 권력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현재의 권력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 첫 등원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눈높이를 맞추면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다”

면서 “이미 수많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여야간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의 입장차도 그리 크지 않다. 유불리를 따지는 정략적 개헌은 있을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반기 국회를 앞두고 개혁입법 연대나 개헌연대 같은 네이밍 다름, 프레임 전선이 형성됐다”면서 “개헌과 개혁입법 모두가 국민의 명령으로 여당의 양보, 야당의 협조를 통한 협치로 풀어 가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또 “야당의 제1 책무는 비판과 견제에 있다”면서 “강력한 야당의 존재는 대통령과 여당에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대미술관을 찾아 참배했다. 문 의장은 방명록에 ‘무신불립 화이부동(無信不立 和而不同·국민의 신뢰 없는 국회,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화합의 국회를 추구 하자는 의미)’이라고 썼다. 이번 참배는 제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원구성 이후 첫 공식행사로 추승용·이주영 부의장, 여야 원내대표들, 국회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개헌·선거제 논의 영수회담 하자”

바른미래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제헌 70주년을 맞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의 모두 발언을 통해 “1987년 개헌 이후 30년 동안 변화상을 담아내고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 헌법 개정과 개헌을 가해야 한다”면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이제는 결실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도 개혁해야 한다”며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게 되면 그 자체로 모든 정당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민주주의 발전의 주요한 경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현실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세균만능주의, 재정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며 “나랏돈으로 만든 일지라는 하책 중의 하책이고,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1차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치개혁 과제 ▲개헌 ▲다당제 확립 ▲선진화법 개정을 통한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 각종 국회개혁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17일 열린 제2차 전국위원회에서 인사를 마치고 손잡고 있다. 왼쪽부터 안상수 혁신비대위 준비위원장, 이주영 의원,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한국당 구원 투수는 김병준

비대위원장 선출 ... 권한·기간 놓고 친박·복당과 갈등 여전

자유한국당이 17일 당을 재건하는 중책을 떠안은 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선출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혁신비대위원장 선출안을 박수로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수락 연설을 통해 “한국정치를 계파논리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소망, 대신에 미래를 위한 가치논리와 정책논쟁이 정치의 중심을 이루도록 하는

꿈을 갖고 있다”며 “이 작은 소망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실정치를 인정한다는 미명 하에 계파논쟁과 진영논리를 앞세우는 정치를 인정하고 적당히 넘어가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달라”며 “계파논쟁과 잘못된 진영논리 속에서 싸우다가 죽으라고 이야기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교수가 이날 당내 분란 없이 비대위원장으로 의결됐다고 해서 당내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비대위원 인선 과정, 나아가 비대위

가 성공적으로 출범한다고 해도 비대위원장의 권한과 활동 기한 등을 놓고 내용이 재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대위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김 위원장에게 전권을 쥐어 한다는 입장지만 친박(친박근혜)계를 포함해 일부 잔류파 의원들은 비대위가 전당대회로 가는 ‘관리형’에 머물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정부 대통령 정책실장 출신으로, 노무현정부에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가 최악위기에 몰린 말기 때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받았고,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남북경협사업 재개 밀착

지도부, 개성공단 입주 기업대표 간담회 애로 청취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밀그림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으로 당장 남북경협을 시작할 수는 없지만 추후 경협사업 본격화를 위해서라도 관련 예산 확보, 입법 조치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민생평화상황실 남북경협팀은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을 방문, “과거와 달리 국회에서도 남북문제 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국회도 실질적으로 입법권까지 갖는 남북경제교류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남북관계를 미리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남북경협팀을 만든 이유에 대해 “남북관계가 다 진전되고 나서가 아니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포함한 여러 관계와 관련 정책과 입법화

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한반도 신경재구상은 개성공단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로 지난 11일 방북 신청을 냈지만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며 “상황을 알아야 저희도 인력이던 몰자던 기계던 충원을 할 수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비점검을 위한 기업인 방북 승인 ▲위기에 직면한 입주기업 애로 해소책 마련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민주당 남북경협팀장을 맡은 김경협 의원은 “국내 중소기업의 활로는 이제는 남북경협 밖에 없다고 본다”며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해소차원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성장전략과 활로 모색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만 결정해서 (재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제사회의 협조와 한미공조가 필요한 만큼 시간이 걸리겠지만, 답답하더라도 양해해주시고 함께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 - 14억
- 급매 - 8억 8천만원 (분할매매 가능)
- 문의. 010-6834-7400